

與, ‘부동산 135만호 공급’ 논의 위해 野와 지속 협의키로

당정, 부동산 9·7 대책 위해
23개 법률 제·개정 필요 공감대
연말까지 野와 일주일마다 논의

PM법 공동발의… 안전체계 구축
소규모 위반 건축물 양성화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135만호를 공급하는 부동산 9·7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 최근 시민 안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PM(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와 윤준근·천준호·이건태·이연희·전용기·한준호·손명수·안태준·임태영·박용갑 등 국토위원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에선 김윤덕 장관과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정책관, 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3대 핵심입법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축정책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9·7 대책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3개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당정협의에 따르면, 현재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부동산 거래신고법 등 5개 법안이 국토위 소위에 회부돼 있다.

주요 법안으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

정비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통합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6년 말로 예정된 일몰제를 폐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논의됐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의 협조를 위해 당정이 노력하기로 했다”며 “향

후 연말까지는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현안을 갖고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도입 이후 현장에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PM업계와 규제 당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PM법을 제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복기왕 간사와 권영진 국토위 야당 간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와 불법 주차·무단 방치 방지를 위한 PM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는데, 해당 법안은 ▲국가·지자체 안전관리 책무 강화 ▲무면허 운행 금지 ▲안전모 착용·보험 가입 의무화 ▲대여사업자 등 특정 강화 및 불공정 행위 금지 ▲주차·충전·수리 등 안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연계 거치대 설치 등이 담겼다.

맹성규 위원장은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건 사고는 2017년 대비 2024년에 교통사고는 20배, 사망자는 6배 급증했다”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중이 약 47.2%로 미래 세대가 교통 안전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관리에 있어, 이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전 관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더욱 더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법적 기준을 마련해서 안전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맹 위원장은 “안전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피해가 없는 주거용 일반 건축물의 합리적 관리 방안이 논의된다”며 “건축주의 불법 행위 책임이 매수인에게 전가되거나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유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위반 건축물 문제는 현재 우리 당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선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한시적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나경원·송언석 의원직 유지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선고
패스트트랙 과정 중 접수 방해 혐의
나경원·송언석·황교안 벌금형 받아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나온 선고다. 다만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 이하라 모두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직은 유지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관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무총리 등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나 의원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국

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 현직 국회의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 1150만원, 550만원이 선고됐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홍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 150만원을, 위외인사인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1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 4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현직 국민의힘 의원 중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 이상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국회의원면책특권, 저항권 행사 등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진다”며 “당시

피고인들이 행한 위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혁위) 회의를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 유지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서예진 기자 syj@

장동혁, 4선 이어 3선 중진 만나… 대여투쟁 결집 당부

3선 의원들과 오찬… 스킨십 강화
존재감 부족·당내 잡음 지적에도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 총공세 지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20일 3선 중진 의원을 만나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전날(19일) 4선 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 연일 의원들과 스킨십을 강화했다.

당 대표와 3선 의원 오찬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정재·김석기·김희정·송석준·이만희·이철규·임이자·정집삼·추경호 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전날 4선 의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여당의 공세가 12·3 비상계엄 1주년 맞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당 의원들의 결집을 요청했고, 3선 의원들과 오찬에서도 집권여당의 공세에 맞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면회, 국회 대규모 집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으로 당 내 극우 세력까지 끌어안는 모습을 지속 연출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중도 소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선수별 의원들을 만나 당 내 결집을 유도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번주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및 정권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여 투쟁을 강화하는 한 주로 삼고 용산 대통령실, 법무부, 대장동 일당 중한명인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빌딩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 728조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 대미 관세 협상 지연 등의 복합 위기에 신음하는 민생과 기업을 살려내고, 꺼

저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재점화할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참담하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은, 전혀 없다.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 살포와 제 식구 챙기기식의 방만 지출로만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중독 그리고 포퓰리즘 폭주를 막아내겠다. 지역사랑상품권 살포와 노조 파주기 등 선심성 거품을 걷어내고, 그 재원이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 쓰이도록 바로잡겠다”며 원내에서도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의 새벽배

송 논쟁,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취소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공로가 조명되면서 장 대표의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당 친한(친한동헌계) 김예지 의원을 겨냥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면서 당이 어수선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고리 삼아 총공세를 벌이겠다는 심산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주 주말에 당 지도부는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부각하는 대국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